

가자지구·수단 등 무력 충돌...유엔총회에 전세계 이목 집중

23~29일 고위급 회기 개최...李대통령·트럼프 23일 기조연설
北, 차관급 파견 가능성...서방국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예고도

세계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했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수단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참상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회기는 어느 해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총회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리며,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 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일반토의를 진행한다.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은 각국 정상이나 총리, 장관급 인사들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연례 외교 무대의 하이라이트로, 전 세계 언론과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

이번 회기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국제사회의 분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미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근과 구호 중단, 강제이주, 생명 위협 위험 속에서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정치적·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 정상들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히며 국제적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총회 개막 전날인

22일 팔레스타인 문제와 두 국가 해방 이행을 주제로 고위급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서방국들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무드 아바스 수반 등 당국자의 입국 비자를 거부·취소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첫 유엔총회 연설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이는 2017년 이후 다섯 번째 연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외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연설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쟁 당사국 가운데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 각각 연설한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대신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7일 연단에 선다. 북한은 마지막 날인 29일 차관급 인사가 연설할 것으로 보이며,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뉴욕에 파견하면 한국과 미국 등이 대화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일반토의 외에도 다양한 공식 부대행사와 정상 간 양자 회담 등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토의의 주요 일정 (잠정)

날짜·장소: 9월 23~29일 뉴욕 유엔총회장

참석: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

핵심 의제: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지속되는 국제사회 분쟁 현안들



23일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첫 번째 기조연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두 번째 기조연설 • 이재명 대통령 기조연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극복 과정 공유, 한반도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정책 제시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기조연설 *일반토의의 주요 일정: 이 대통령, 안보리 공개 토의의 주제(의장 자석)
25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기조연설
26일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기조연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조연설 • 이시바시 게루 일본 총리 기조연설
2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기조연설
29일	북한 차관급 인사(전망) 기조연설

연합뉴스

자료: 유엔

외교 이벤트가 쏟아질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24일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 및 안보'를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며,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한국의 위상을 알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네팔 '교도소 탈옥수' 본격 추적

네팔 카트만두의 힐튼 호텔이 반정부 시위 중 화재로 크게 훼손돼 검은 연기가 도심 상공을 뒤덮고 있다. 정부의 SNS 차단으로 격화된 반정부 시위가 교도소 집단 탈옥으로 번지자 경찰이 1만여 명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확대 절차

29일까지 의견 수렴 진행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 추가 품목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상무부는 접수된 요청에 대해 60일 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조사·협회 요청에 따라 매년 5월, 9월, 1월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는다.

지난 6월에는 의견 접수 결과를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적용했다.

상무부는 또 자동차부품을 25% 관세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절차도 관보를 통해 공지했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 5월 3일부터 일부 품목에 25% 관세가 부과됐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추가 보호가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추진체계, 자율주행 기술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국방과 연계될 수 있는 신제품을 식별하고 관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은 10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접수 후 60일 내 관세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 주체는 미국 내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관련 협회로,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정기적으로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 품목이 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 검찰,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에 사형 구형키로

美국무 장관 “커크 죽음 기뻐하는 외국인 추방하겠다”

미국 우파 정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러 로빈슨(22·사진)에 대해 검찰이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정식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타 카운티 검찰은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기의 방아쇠에서 발견된 DNA가 로빈슨의 것과 일치한다며 “찰리 커크 살해는 미국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법원 기록에는 로빈슨이 룸메이트에게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문자로 밝혔다고 적시돼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그는 범행 직후 룸메이트에게 “내 키보드 밑을 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곳에는 “나는 커크를 쓰러트릴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을 거다”라는 메모가 있었다.

룸메이트가 “내가 그걸 한 건 아니지?”라고 묻자, 그는 “내가 했어. 미안해”라고 답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계획 시점은 “일주일 좀 넘었다”고도 말했다.

로빈슨은 현재 구금 중이며,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해 자살 방지용 특수 의복을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활동했던 온라인 매신저 ‘디스코드’ 그룹채팅방 참여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빈슨은 해당 채팅방에서 “어제 유타밸리 대 사건은 나야. 미안하다”는 글을 남겨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파텔 국장이 사건 초기 잘못된 정보를 공개해 수사를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빈 상원의원은 “커크 암살범을 잡았다는 공을 과시하려다 공공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고, 파텔 국장은 “실수가 아닌 대중과 협력 차원의 발표였다”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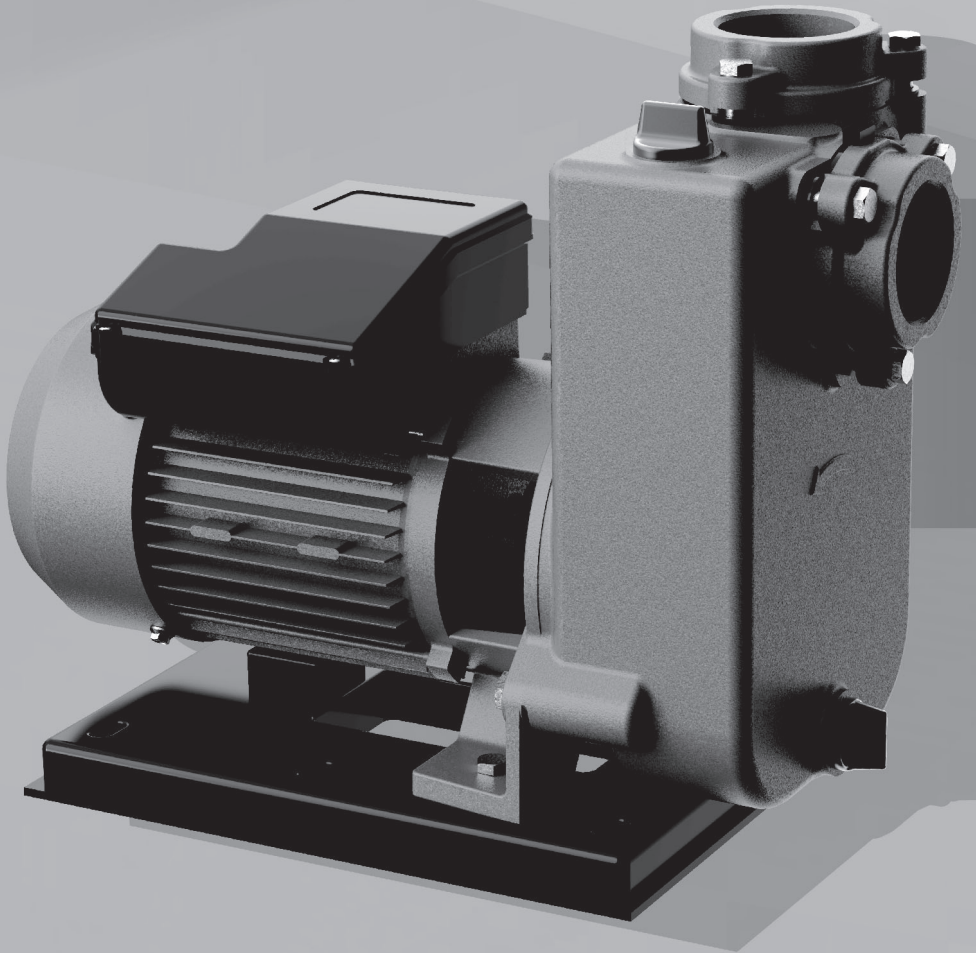
청문회에서는 파텔 국장 취임 이후 트럼프 관련 수사를 이끌던 요원들이 해고된 것을 두고 ‘정치보복’ 논란도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X(옛 트위터)에 “비자 취소가 진행 중이며 정치적 인물의 암살을 환호한다면 추방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